

건설교통부 <건설산업 상생협력 혁신방안> 대통령 보고

전문건설업체와 일반건설업체 파트너링 공사방식 활성화



△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3월 22일 청와대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 박종학 회장 등 건설업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혁신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설명 / 대통령 좌측 변양군 기획예산처장관, 우측 첫 번째부터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권홍사 대한건설협회장, 정장울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박종학 대한설비건설협회장)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대한설비건설협회 박종학 회장 등 대·중소 건설업계 대표, 관계부처 장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공기업 등 발주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혁신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건설교통부는 「참여주체 모두가 상생협력해 선진화되고 경쟁력 있는 건설산업 육성」이라는 비전 하에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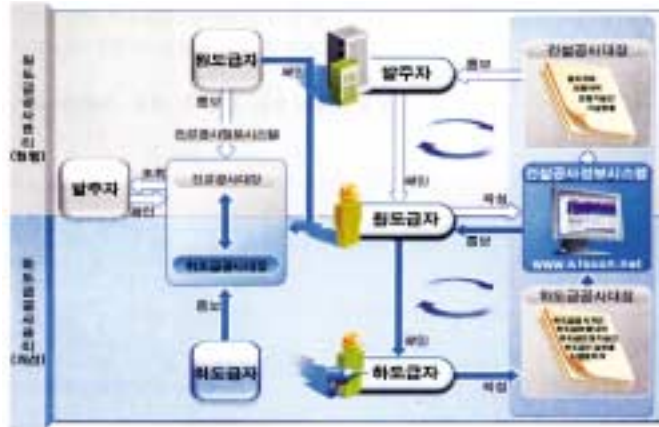
첫째, 상생협력 파트너링 확산을 위해 상생협의체 구축, 파트너링 공사방식 활성화, 공동수주 및 공동기술개발을 확

대하기로 했다.

둘째, 하도급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투명한 하도급관리체계 구축, 하도급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건설업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공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인력·자재의 안정적인 공급, 건설생산체계의 선진화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

다음 내용은 이날 건설교통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혁신방안이다.



△ 정보화 통한 투명한 하도급관리체계 구축

▲ 상생협의체 구성 · 운영

현재 미국이나 영국의 일부 대형공공공사 현장에서는 발주기관과 원·하도급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공정을 체크하고 공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점을 상호 협의 하에 해결해 나가고 있다. 기술과 정보 및 성과를 공유하는 협력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대형공공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원·하도급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건설공사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이와 유사하게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오는 4월 중 18개 공공공사 현장에서 시범적으로 구성될 상생협의체는 발주자와 건설업체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효율적인 공사수행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공사비를 절감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하게 된다.

상생협의체가 구성되는 공사는 상호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은 물론, 하도급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 대해 자금과 기술지원을 보다 확대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상생협의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매뉴얼을 작성·보급해 상생 분위기를 점차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대·중소기업의 해외건설 공동수주 지원

앞으로 대·중소기업이 해외건설에 공동으로 진출할 경

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시장개척지원자금 지원시 우대하고 중소기업체에 해외공사정보 및 수주지원을 위해 올 4월중 해외건설협회에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시범적으로 대통령순방 등으로 협력기반을 마련한 알제리와 나이지리아 및 이라크에 대해서는 양국 민간업계 간 건설산업 포럼을 구성해 대·중소기업 공동수주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 건설기술개발에 대·중소기업 협력 지원

대·중소업체간 공동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우선 올 상반기 중 건축, 토목 등 5개 분야에 공동기술개발과제 10개를 선정해 대·중소업체간 역할을 분담해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이들 공동개발 과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의 (연구개발 R&D) 예산을 최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소업체간 기술공유체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대형업체가 개발한 기술을 중소기업체와 공유하는 경우 입학 시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이 강구된다.

▲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 투명성 확보

앞으로 공공공사는 일정비율을 파트너링 공사방식(주계약 자형 공동도급제)으로 발주하도록 해 일반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되면 건설공사 입찰시 주계약자뿐 아니라 파트너링으로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체를 모두 심사해 능력 있는 업체가 공정하게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사입찰시 원도급자가 제출하는 하도급관리계획에 대한 발주자의 심사와 관리를 강화해 하도급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이 계획서상에 하도급업체를 경쟁방식으로 선정하는 경우 우대하되 저가하도급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한 제한경쟁, 저가심사기준 이행 등 보완 대책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하도급공사정보망

내년 말까지 현재의 건설산업관리정보망에 하도급정보망을 추가로 구축해 하도급 관리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 하도급정보망에는 하도급 계획뿐만 아니라 공사진행 과정상의 하도급 관련사항도 입력하게 해 발주자가 상시 체크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대금지급이나 공정관리상 문제가 발생하면 정보망에서 자동으로 경보가 발령되게 하고 경보가 발령되거나 하도급업체가 이의 제기시에는 이를 철저히 하도급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사업 효율적 추진 적정성장기반 구축

현재 추진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국가균형발전사업과 각종 SOC 민자유치사업 등도 효율적으로 추진해 건설산업의 적정 성장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들 국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아울러 품셈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도 보완하고 실적공사비 제도를 확대하는 등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시장질서 깨뜨리는 부실업체 상시퇴출체계 구축

현재 건설현장에 난립하고 있는 무자격 부실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3년 주기로 모든 업체를 개략 조사해 처분하

고 있으나 처분 뒤 바로 다른 페이퍼컴퍼니를 양산하는 등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공공공사를 수주한 업체를 대상으로 무자격 여부를 정밀조사하고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낙찰을 취소하고 처벌하는 등 철저히 조치하기로 했다.

페이퍼컴퍼니로는 수주해도 소용없고 처벌만 받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계획이다.

▲중소업체 기능인력 및 자재 안정적 공급

현재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를 위해 앞으로 대형건설업체 부설 기능학교에서 협력업체의 기능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실업계 고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필요분야 기술교육 후 바로 채용하는 시스템을 확대할 방침이다.

동절 휴면기간 중에도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퇴직근로자 지원제도를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는 등 건설일용직의 고용과 복지 확대를 통해 일용직 근로자의 건설분야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상생분위기 조성 건설선진화 과제 추진

건설교통부는 상생분위기 조성을 통해 지난해 11월 출시될 주관으로 확정한 건설산업 규제합리화 방안 등 그 동안 마련한 건설산업 선진화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업역 제한 완화, 업종조정, 입찰제도 개선 등 건설산업 선진화 과제는 그 당위성이 인정되면서도 업계별로 다양한 이견이 잔존하고 있어, 앞으로 업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업계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한 보완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 상생에 바탕을 둔 협력하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계획

건설교통부는 이번 보고회가 그 동안 건설공사 참여주체 간 쌓여 있던 불신과 대립을 해소하고 신뢰와 협력 속에 건설산업 상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과제 중 법령개정이나 예산반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과제는 올해 말까지 조치하되, 그렇지 않은 과제는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